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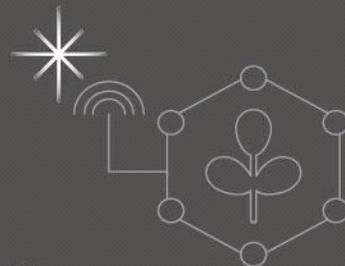


정·책·토·론·회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일 시 2025. 7. 9.(수) 13:30

장 소 강원랜드 그랜드볼룸 4F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토론회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등록 및 개회	12:50~13:20	30'	등 록
	13:20~13:30	10'	식전행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소리공연)
	13:30~13:45	15'	개회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축 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최승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기조강연	13:47~14:17	30'	새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 과제 -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발 제	14:17~15:57	100'	주제1 농어촌주민수당 활성화 방안 -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주제2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사례1 늘봄 사례로 본 농촌마을 해법 -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대표 사례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례 - 김돈곤 청양군수
휴 식	15:57~16:10	13'	휴식 및 토론 준비
패널토론	16:10~17:30	80'	정책토론(좌장 김창길 외 7인) * 박성우(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재관(더불어민주당), 김지현(발명대표), 박다정(한맥대표), 이문무(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 이재영(증평군수)
만 찬	17:30~19:00	90'	마무리 및 만찬

* 시간계획 및 주요내용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ONTENTS

■ 기조강연

- ① 새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 과제 1
- 장 민 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1

- ② 농어촌주민수당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15
-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2

- ③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 41
- 최 재 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사례발표1

- ④ 늘봄 사례로 본 농촌마을 해법 53
- 홍 의 식 늘봄영농조합법인대표

■ 사례발표2

- 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례 61
- 김 돈 곤 청양군수

01

새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 과제

장 민 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2025.7.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촌의 미래를 바꾸다

(사)농정연구센터/전환랩생협동조합

장민기

목 차

- I. 개요 및 논의 목표
- II. 농업·농촌의 미래 과제
- III. 지역중심 농정으로 추진체계 개편
- IV. 결론

1. 개요 및 논의 목표

1. 문제 의식

위기(危機)를 넘어 대전환(大轉換)의 시대로 진입.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근본 문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

치열한 경쟁, 리스크 폭증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질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래가치 중시

미·중 2강의 갈등과 국제 블록간 경쟁

기술 신산업화, 시스템간 경쟁 격화

[강한 지역, 위기돌파와 희망 찾기]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위기대응

고령사회 진입, 전반적 경제 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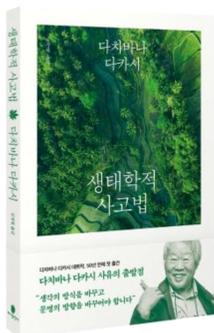
장기 시야의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

세대 계승, 지속가능성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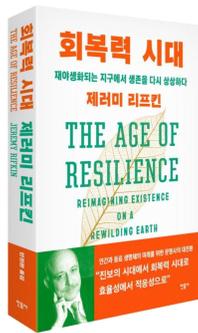
저성장, 저출산의 경제·사회적 위기 시대

[참고] 사고의 전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경제·사회의 시스템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음.



- 1971년 발간, 2020년 번역
- 인간과 자연과 세계의 관계를 생태학 ecology 관점 탐구.
- 인류생존의 위기, 생태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 성장의 시대에 효율성 관점이 었다면, 회복력(리질리언스) 시대는 적응성 관점으로.
- 생산성에서 재생성, 소유권에서 접근권, 판매-구매에서 공급-사용자 네트워크, 중앙집중에서 분산식공유, GDP에서 QNI로.



- 지정학-전제정치 강화, 세계 경제-불평등과 빈곤, IT중심 산업구조-일자리의 위협
-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 단절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야 하며, “생명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생명과 안전, 삶 현상의 실제적 중요성.

자료 : 출판사의 발간 소개 자료, 교보문고

2. 농업·농촌의 방향

지역소생(地域蘇生)과 미래도전(未來挑戰)은 지역의 농업·농촌과 농정에서 부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

농업경영체 고령화와 인력 부족, 가격과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

공공·사회 서비스 취약화, 빈집과 유희화. 수도권 및 집중지역과의 격차 확대.

농업의 가치 창출력 발현, 지역활력의 기초

생활거점, 경제거점 농촌공간의 면(面)적 재구성

미래세대가 정착이 가능한 다양한 기회의 영역

농촌주민의 기본소득 확보, 풀뿌리 지역경제 조성

농지 이용 효율화, 전문경영체 주도력 확대. 다각화된 농업 및 농산업으로 중소농 안정.

농어촌 생활 기반 확충하고, 교류 확대. 추진체계 개편으로 농촌사회혁신 기반 마련.

3. 논의 목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미래”(=의제)와 “혁신”(=추진체계) 두 측면에서 과제들을 모색함.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 혁신의 요구에 대해

지역 활력의 기초인 농업·농촌의 미래 과제에 대해

분권, 자치 농정의 논리와 추진체계 구축의 틀에 대해

지역의 미래와 희망, 지역 농정 혁신의 방향을 검토함.

II. 농업·농촌의 미래 과제

1. 왜, 미래(未來)인가?

위기의 시대에 지역 농업·농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
사회 흐름과 생각의 본질적 변화에 집중하면서 의제의 전환을 이루어야.

미래, 낙관과 희망

- 미래의 이미지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중첩되어 있음.
- 본질적 변화와 대안을 중심으로 **“낙관적 시야”** 확보.
- 미래 가치를 다양성, 회복탄력성에서 찾는 노력 필요.

논의를 위한 주요 키워드

농업구조

= 농지, 경영체, 미래세대 =

기후위기

= 에너지전환, 산지이동 =

농촌 사회혁신

= 농촌돌봄, 거점공간 =

소망하는 미래 우리 농촌·농업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노력

2. (미래 의제 1) 농지와 농업경영체

농업구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나 구체 상황은 일선 시군에서 전개됨.
지역농업 구조 (농지, 작물, 경영체) 인식과 임무변화에 주목해야 함.

지역농업 구조의 문제

농지 및 농업자원

- 지역 입지에 따라 농업 여건 차이
- 농지 이용저하, 농업인프라 노후화

농업경영체

- 청년후계농 등 미래 세대 정착 애로
- 분산, 소규모화 등 주력경영체 부족

지역농정과 지역농업

지자체의 임무 개편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 계획” 도입 및 지자체에 보전, 관리 임무부여**
-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전환사업의 완전 사무이양** 등 자주재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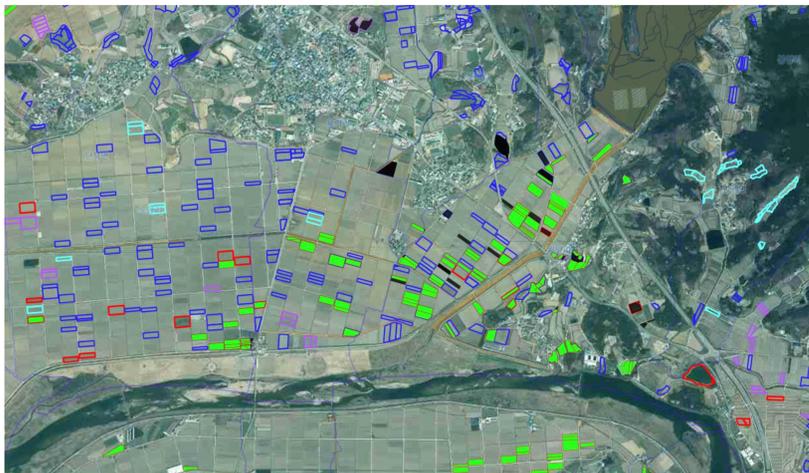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의 전략 행동 필요.

지역농업의 역할 정립, 지역농업자원과 경영체를 결합한 구조변화 대응

[참고]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법 제15조)

분산된 농지 소유·이용 상황은 이후 농업생산력 유지에 큰 장애가 될 우려.
공동경영체, 단지 구축 등 지역에서 건실한 경영체 구성을 노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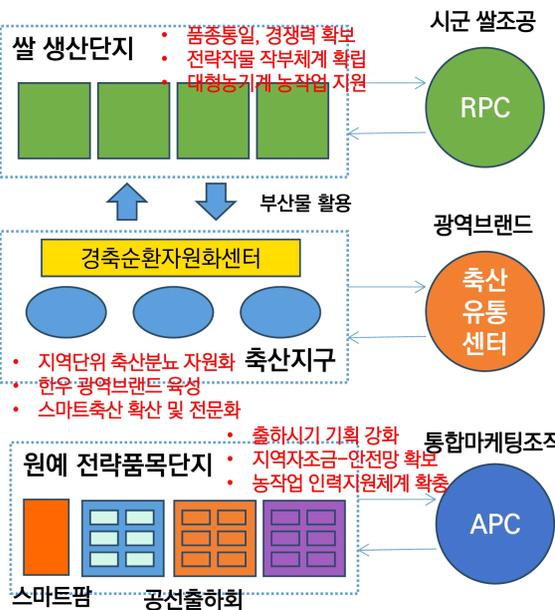
지역, ***** 들녘 단지 공동영농 단지 필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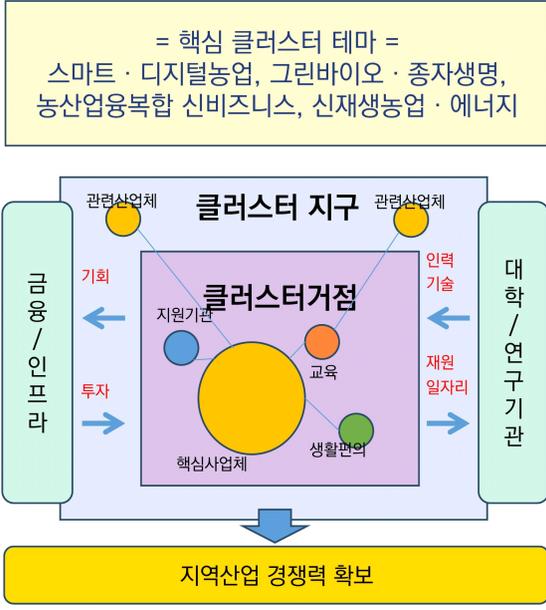
- 전략작물 단지화, 공동영농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높은 분산성으로 근본적 한계.
-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으로 농지이용권의 집약을 집중 추진 : 임대차 조정, 참여농지 확보와 교환 등 지자체와 농지은행 역할 중요.
- 공동영농조직의 지역농업경영 리더십 확보, 비즈니스 확립 지원 필요.

[검토] 지역주체의 형성 : 단지, 클러스터

핵심품목 농업생산, 출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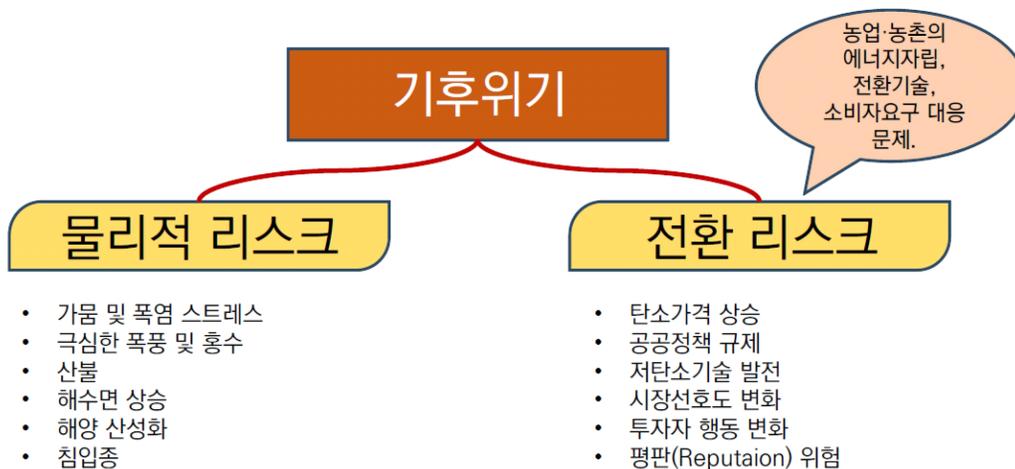


농산업 전략 클러스터



3. (미래 의제 2)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자립

기후위기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전환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음.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 현장에서 극복하는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



자료 : David Carlin, Maheen Arshad, Katy Bake (2023), Climate Risks in the Agriculture Sector, Sectoral Risk Briefings, UNEP Finance Initiative

[사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지역의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
자원순환과 지역공동의 협력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임.

충남 홍성 결성면 원천마을



전남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



개별성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모델 추진

[사례] 주품목 이동과 틈새 기회

기후변화를 지역농산업의 시스템적 전환으로 극복.
 단계적 기후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新산지로서의 기회를 포착.

강원 정선 임계면 사과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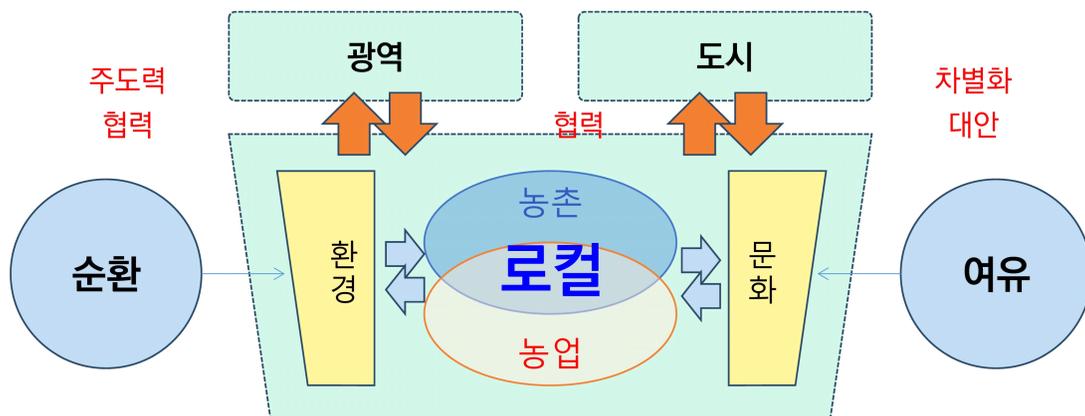
경남 거제 아열대 작물



지역농업 시스템 재구축으로 “산지(產地)”의 이동을 기회로 승화

4. (미래 의제 3) 농촌 사회혁신

하드웨어(HW) 중의 농촌개발 전략에서 탈피.
 지역, 농촌의 차별적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교류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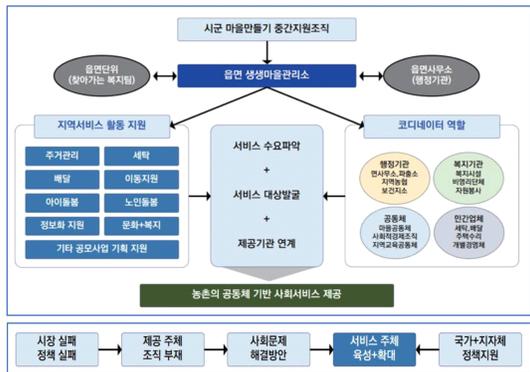


개발과 양적 성장에서 탈피한 대안적 발전의 길을 찾는다!

[사례] 농촌생활돌봄

농촌 생활돌봄이 확산되면서 사회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활성화. 고령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생활물품, 교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전라북도 생생마을관리소



농촌돌봄 마을, 활동



지역공동체 자립의 돌봄 서비스, 농촌일자리로 연결

자료: 황영모·정호중·권오현(2023.11),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Issue Briefing, 전북연구원

[검토] 농촌공간, 거점 구상

도시와 다른 농촌다움, 농촌성에 기반한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생활기반과 공동체의 유지, 융합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점화 구상 필요.

농촌다움과 농촌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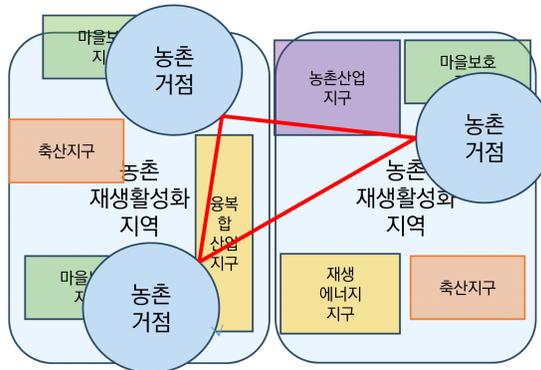
- 지역 특성을 최대화
- 농촌다움이 도시-농촌 지역 교류의 기반이며,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제공
- 지역 공동체의 유지, 활력을 위한 사람과 활동에 집중

(참고) 농촌거점 구상(안)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연계.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특화지구 등 지구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성을 확보.

컴팩트(Compact) 전략

- 인구감소 대응, 사회서비스 기능 유지
- 생활과 직접 관련된 면단위 거점 확립
- 거점을 기반으로 농촌경제활동 융복합 일자리 창출



Ⅲ. 지역중심 농정으로 추진체계 개편

1. 왜, 혁신(革新)인가?

농업, 농촌의 활력을 위해 지역중심 농정으로 개편.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계획·정책 협약, 협치와 융합의 농정조직 구성.

목표와 방향

지역 중심의 새로운 농정 추진체계 확립

- 기후·환경·삶의질 중심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
- 지역의 요구, 특성에 따른 현장 중심 농정 추진

추진 과제

중기 계획에 기초한 중앙, 지방의 일체화된 농정 목표와 과제 설정.

농정의 대영역별 협약 방식 도입으로 지역 자율성 확대.

지역 협치농정으로 객관적 의사결정 구조와 통합된 실행 조직 구축.

2. [혁신 의제1] 중앙-지방의 역할 배분

지역중심 농정은 중앙-지방의 역할 조정으로 부터.
직접지불의 기본/선택 추진체계 재구성, 분권에 대한 국가적 추진에 부응

직접지불 집행 시스템 개편

기본직불

- 국가적 과제
- 전국 일률의 기준 적용

선택직불

- 국가적 의제 중 지역이 선택
- 지역의 주도, 모니터링 및 성과도출
- 중앙-지역 협의체 구성

분권형 재정 재편과 연계

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

- 국가의 행정, 재정 체계 개편 필요
- 포괄보조, 기금형 등 대안적 방식 검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 농식품부 이외 부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 자체의 통합재원 관리
- 마스터 계획, 전략 계획 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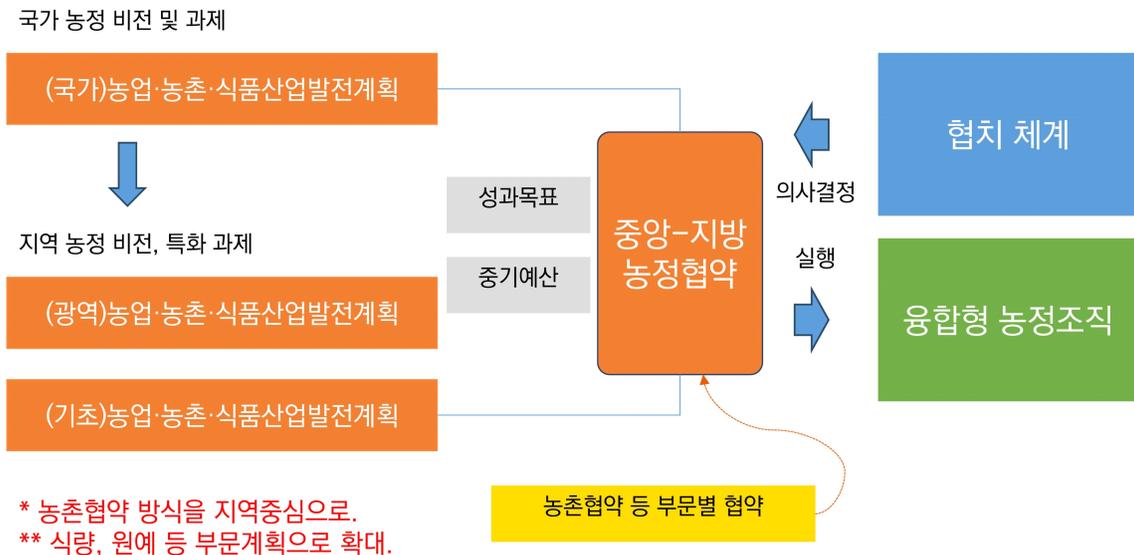
단기 개편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검토] 정책군 구분 : 중앙-지방 역할 배분(예)

정책군	주요 사업	배분	비고
국가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섭, 국제협력, 수출입 • 검역, 방역, 위생·안전 • 대규모농업생산기반 • 기초R&D 및 혁신클러스터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및 기관 직접 시행
공익형직불 (기본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불 : 일반, 소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집행*
공익형직불 (선택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직불 : 친환경, 경관보전, 환경보전, 탄소중립, 농지활용(이모작), 청년농(안) 	중앙 지방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 과제설정·점검 • 지자체 : 지역계획 수립 및 실행
농산업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력 확충 : 쌀, 맥류, 두류 등 핵심작물 • 재해대응 및 중소규모 농업생산기반 : 돌발병해충, 가뭄, 생산성 향상 • 산지유통 기반 구축 • 농업경영체·농업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 주요품목수급, 농지·인력·HW총량 • 지자체 : 주산지품목수급, 먹거리 전략
지역농식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 지역농특산물 특화, 브랜드화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지역통합사업조직
농촌 경제 및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화 • 농촌공동체 활성화 • 귀농·귀촌 정착지원 • 농촌정주기반 확충 • 농촌에너지자립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2. [혁신 의제2] 계획 체계화와 정책협약 체제

국가 및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기반.
중기(5년)의 부문별 농정 협약과 중앙-지방 협의 체계를 구성.



4. [혁신 의제3] 지역의 추진 체계 정비

지역중심 농정은 지역의 자구적 기획역량과 협치에 따라 성과 결정.
지역의 정제된 의사결정과 통합된 추진 기구 구성이 중요.

정제된 지역 의사결정 구조

역량의 결집

- 지역민의 농정 참여 통로 확보
- 관과 민의 다양한 의견, 역량을 지역 계획과 실행으로 결집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원칙

- 신뢰도 높은 지역 농정 추진
-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지자체 역할, 위원회 등 협의와 공개

농촌 중간지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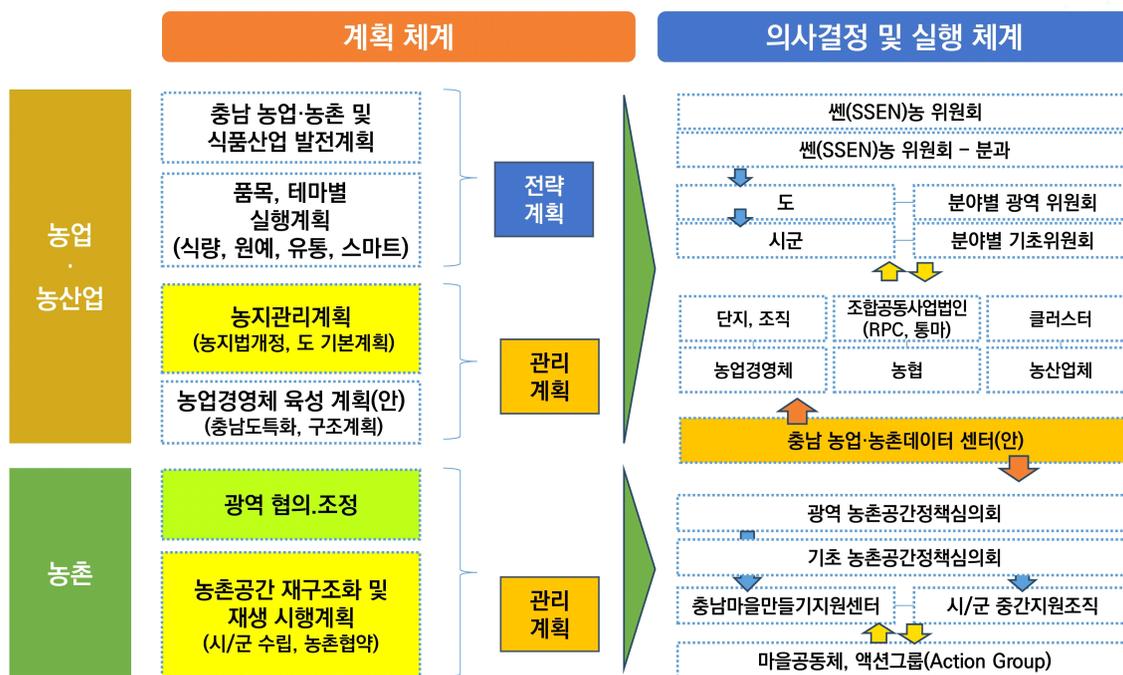
필요성

- 농촌의 복합, 다양한 정책 영역 대응
- 사업간 연계, 통합된 역량을 투여
- 외부 및 전문그룹 협력의 통로 역할

중간지원 조직의 분산성 극복

- 일관·통합 조직, 자주적 사업추진
- 사업형 중간지원 조직 등 새로운 논의와 적정 모델에 대한 지속적 검토

[검토] 충남농정 추진체계 (제안, 예시)



자료 : 장민기 (2024. 3.), 충청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 자료

IV. 결론

결론

지역 농업, 농촌은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함.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에게 대안과 희망을 주는 지역의 가치에 주목.

안전, 안심,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지역농정의 역할.

감사합니다

02

농어촌주민수당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간 공동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25.07.09, 정선 강원랜드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박 경 철 박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내용

Prologue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2. 농어촌기본소득의 배경 및 필요성
3.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실행 방법
4. 농어촌기본소득 실시 사례
5. 기대 효과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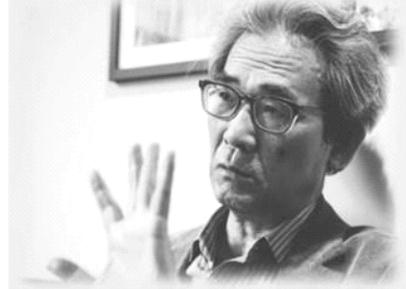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그 시작은 농촌주민으로부터



농촌주민기본소득 첫 공론화
(2014. 5. 12, 홍성문화원)
강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망해가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지방선거 농민수당, 농촌수당 공약
(2018. 6)



정의당 주최 농민수당 국회토론회
(2018. 11. 8)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 제도 조례
제정(2018. 12. 21)



해남군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2019. 6. 26)



전북도청/2019. 07. 01



충남도청/ 2019. 07. 24



전남도청/ 2019. 07. 25



전남도청/ 2020. 06. 04



경기도/2018.11.28



경남도청/2019.07.01



충북도/2019.11.27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창립 2020.02.18

전국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 추진 현황(2023)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2022년 도내 참여 희망 17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2022년에는 도내 17개 시도로 확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경기 연천군 청산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2년부터 농가(10만4천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가(16만5천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상반기 40만 원, 하반기 40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2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2022년부터 농가당 30만원(공동경영주 추가 30만원) 지급
경북도	농어민수당	2020년 조례제정, 2022년부터 농가당 60만원 지급 예정 *봉화군은 2019년 50만 원, 2020년부터 70만 원 지급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24만3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강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름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 이름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2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2021년부터 어가, 임가 포함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부터 개별 농업인당 40만원 지급
인천시	농어업인공익수당	2021년 조례 제정. 2022년부터 농가당 60만원 지급
울산시	농민공익수당	2000년 조례 제정. 2022년 농가당 60만원 지급
세종시	농업인수당	2023년 조례 제정. 2023년부터 농가당 60만원 지급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에 나가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무너지는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농어촌주민을 농어촌의 주인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사례

▪ 개념 및 이념

•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란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직업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 기본소득 5원칙

: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 범주형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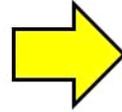
: 청년, 아동, 노인, 농민(참여소득), 예술인(참여소득) 등등

•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기본소득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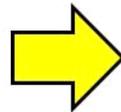
-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 소득불안(precariat)
- 복지사각지대
- 4차산업혁명
- AI시대 일자리 감소



인간의 기본
생존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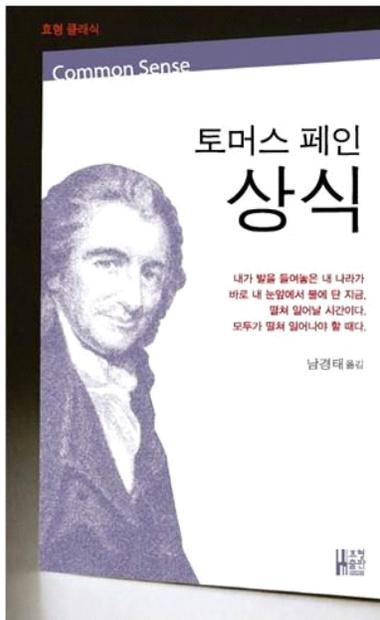
▪ 기본소득 반대 의견

- 막대한 재정 필요
- 현금성 포퓰리즘 만연
- 정부의 비대
- 정부 의존성 심화
- 근로의욕 감소



선별적
사회보장 필요

2. 이론적 기초: 토마스 페인의 토지배당



■ 이력과 저서

- 1737년 영국 잉글랜드 퀘이커교도 가정에서 출생
- 13세까지 수학 후 가난으로 코르셋상점 점원 등 여러 직업 전전하며 정치와 사회제도 모순 체득
- 17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상식_Common Sense>을 출판해 미국 독립의 당위성 주장
- 1771년 <인권_Rights of Men>을 출판해 영국 군주정의 모순 비판
- 1779년 기본소득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토지분배의 정의_Agrarian Justice>를 출간
- 1807년 미국에서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빈곤과 고독 속에서 생애를 마침

■ 토마스 페인의 <기본소득의 필요성> 주장과 방법

시민배당 방법

연간 기금		566만 파운드
노인 40만 명에게 매년 1인당 10파운드씩 지급	400만 파운드	
21세 9만 명에게 1인당 15파운드씩 지급	135만 파운드	
		535만 파운드
잔액(비노인, 장애인)		31만 파운드

“이 계획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공화국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토지 재산 제도에 의해 자연적 상속권을 빼앗긴 수많은 계층에게 국가적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동양사상과 기본소득

동양사상

天下爲公

세상은
모든
이의 것



실천방법

공전제

정전제
균전제
여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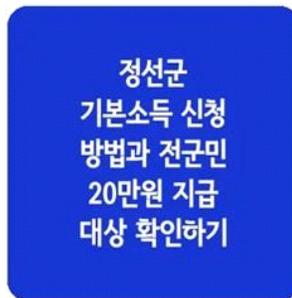
실천목표

大同世上

모두가
함께사는
세상

중국고서 《禮記》 편: '진리가 행해지면 세상은 모든 이의 것이 되며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말한다'

국내 기본소득 도입 현황



국외 기본소득 도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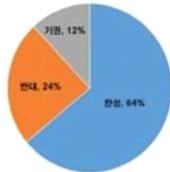
아시아경제

세계는 기본소득 논쟁중...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

5면 1단 | 기사입력 2019.06.27. 오전 11:15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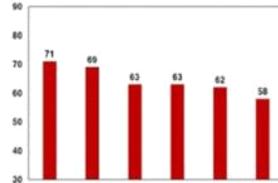
국가	시기	내용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2017년5월~	- 사회보장급여 받고 있는 600~900명 대상으로 매달 현금으로 개인 또는 부부에게 지급, 960유로를 받는 집단 등 6가지 모델로 구성
미국 알래스카주	1982년~	- 1976년 석유 수입에 근거한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설치, 1982년부터 영구기금 수입으로 모든 주민에게 1년 1회 배당(1000~3000달러)
핀란드 중앙정부	2017~2018년	- 장기실업자(25~58세)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 지급하는 실험 진행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7년7월~ 2018년9월	- 18~65세 빈곤층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달 1320캐나다달러 지급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년12월~	- 시 정부가 참가자 950명에게 매달 1000유로 내외 지급, 지급액 일부 불복체인 7만 지역화폐로 지급

EU의 기본소득 찬반입장¹⁾



※ 1) 2016.4월 EU 28개국 10,000명을 대상

국별 기본소득 찬반입장¹⁾



자료: Dalia



주최 | 유럽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주최 | 유럽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주최 | 유럽위원회 수석연구위원

EU 기본소득 찬반입장 한국은행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2017)

2. 농어촌기본소득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 배경

공정과 분배의 실패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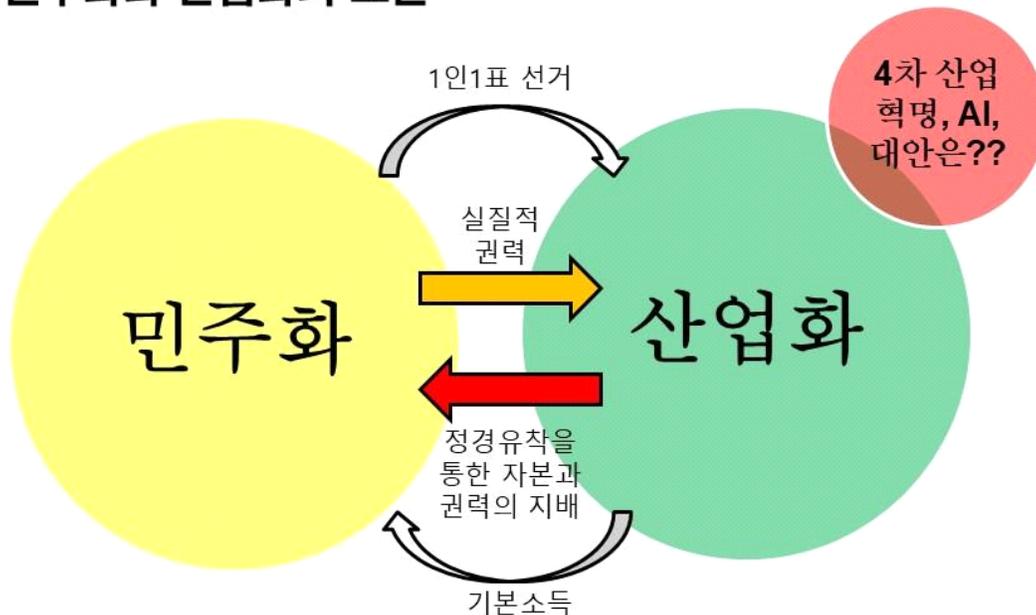
지속하기 어려운 사회



N포 세대, 저출산, '지역소멸'..

OECD국가중: 저출산, 자살률, 노동시간 최고 수준

▪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순



도시의 '식민지' 로 전략한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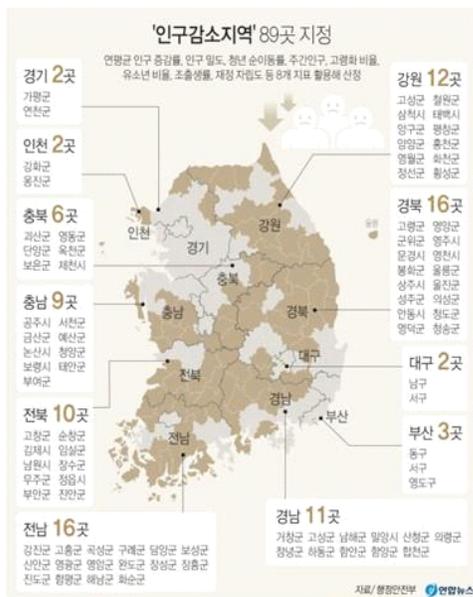
소위 근대화/산업화 이후 농어촌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

- 농업/농산물은 물가관리, 수출주도경제, 도시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관리와 희생의 대상
- 농어민/농어촌주민은 도시의 값싼 노동자로 전환되도록 강요당함
- 농어촌은 도시의 각종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발전소, 폐기물단지로 전략

➤ 결국 중앙정부와 도시자본에 의해 농어촌이 말살됨

지방소멸 가속화

▪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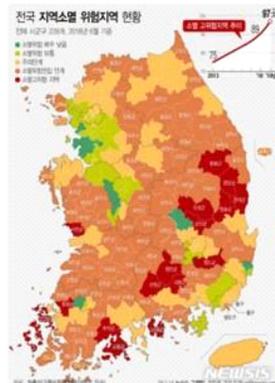


행정안전부 2021. 10. 18

인구감소지수

- 연평균 인구 증감률
- 인구밀도
- 청년 순이동률
- 주간인구
- 고령화 비율
-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전국 97개 지자체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여전히 도시중심 정책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오히려 도시의 집중, 농어촌의 소외를 강화시켰다.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도시 건설에 편향
- 농어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피폐화 시키는 정책

➤ 결국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자기모순을 내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 직면

-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초과(2019)



자료: 통계청

농어촌을 지키는 것은 생존의 문제

농어촌을 지키는 것은 가치와 철학, 궁극적으로 생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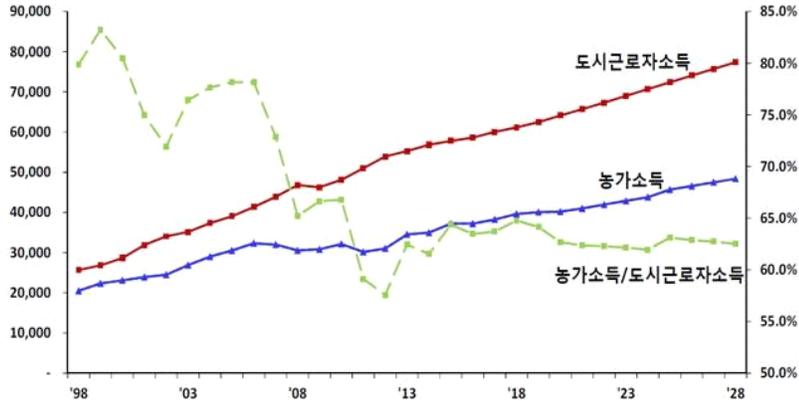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전략산업임. 미래 기후위기와 식량전쟁 시대를 대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안보산업임
 - 농어촌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공동체, 생태적 다양성, 국토수호, 인구분산, 균형발전, 휴양과 쉼터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영토임
- 이러한 농어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없기 때문임

농업농촌의 핵심문제: 소득불평등

▪ 도농 간 소득격차 지속 확대

• 2018 64.8% → 2028년 62.5% 예상

✓ 2020년 도농 간
소득격차 61.5%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9

29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촌 문화, 경관, 환경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보장한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EU 71.7%(2016),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5), 우리나라
15%(2020)

특히 유럽은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 그들이
최소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스위스)과
법률(독일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상과 정책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외국에서 무한대로 수입할 수 없다.

농어촌인구는 더 이상 도시노동자로 나갈 수도 없다.

농어촌은 더 이상 도시의 쓰레기/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식량위기, 기후위기, 지역소멸위기 시대에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물극필반(物極必返)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회생의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3.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실행 방법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

✓ 정의

-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수준, 노동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5원칙: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 개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범주형 기본소득)

-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국가의 시혜가 아닌 농어촌 주민의 당연한 권리

★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마중물 또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에 더 두텁게 지급

농어촌기본소득의 목적

✓ 5가지 목적

- 첫째, 농어촌 주민의 경제사회적 기본권 보장
- 둘째,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
- 셋째, 농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속
- 넷째, 농어촌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 다섯째,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실현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

✓ 대상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어촌지역: 면, 읍, 동지역 중 생산복지지역(장관 고시)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읍지역은 도시로 포함
- 통계청 인구조사: 읍지역은 도시로 포함

* 2020년 기준 인구:

면지역 465만명, 읍지역 511만명, 동지역농민 약 80만명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

✓ 우선 순위(부득이 선별이 필요 시)

<주요 사항>

- 낙후도: 1)면 2)읍 3)동
- 인구감소 심각지역

<기타 감안 사항>

- 환경피해지역: 발전소, (폐)광산, 사격장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 규제지역: 문화재, 군사, 상수원 등 개발이 규제된 지역

* 시범사업 실시 시 우선 순위 지표로 활용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

✓ 우선 순위: 충청남도의 경우

인구감소(2015-2020) 심각지역
기준으로 설정

기타 감안사항(규제 및 보호지역) 반영

충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잠정 대상지역

구분	잠정 대상지역(면): 인구수 4,555명 이하, 감소율 10.0% 이상	잠정 대상지역(면): 인구수 2,500명 이하, 감소율 5.0%~10.0%
천안시	상남면(3,247명, -12.2%), 북면(4,357명, -10.6%)	동면(2,119명, -9.5%)
공주시	반포면(4,222, -12.6%), 탄천면(2,971명, -11.9%), 이안면(3,290명, -11.4%)	해당사항 없음
보령시	상주면(2,286명, -15.6%), 미산면(1,729명, -14.3%), 청소면(2,640명, -12.7%), 오천면 어항출장소(1,628명, -12.0%), 주포면(1,663명, -10.1%)	오천면(2,179명, -7.1%), 원산도출장소(1,126명, -6.2%), 주산면(2,453명, -9.2%)
아산시	산장면(3,139명, -14.7%)	해당사항 없음
서산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논산시	온진면(3,978명, -18.0%), 노성면(3,020명, -16.7%), 채운면(2,274명, -15.8%), 상동면(4,173명, -14.8%), 기아곡면(3,439명, -13.6%), 광석면(4,243명, -13.2%)	발곡면(2,477명, -9.6%)
계룡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해당사항 없음	대호지면(2,434명, -9.4%)
금산군	부리면(2,462명, -11.9%), 복수면(3,072명, 11.1%)	해당사항 없음
부여군	세도면(3,174명, -14.9%), 초촌면(2,136명, -14.3%), 석상면(2,923명, -13.3%), 남면(1,853명, -12.2%), 내산면(1,555명, -11.9%), 양화면(1,688명, -11.8%), 외산면(2,382명, -10.5%), 홍산면(2,901명, -10.4%)	구룡면(2,378명, -9.6%), 옥산면(1,427명, -3.6%), 송화면(1,138명, -8.3%)
서천군	화양면(2,264명, -13.2%), 미서면(4,939명, -11.7%), 비인면(2,950명, -10.7%), 중천면(2,049명, -10.3%)	기산면(1,674명, -9.9%), 시호면(1,286명, -5.9%), 문신면(1,262명, -6.6%), 판교면(2,135명, -8.8%)
참판군	장평면(2,335명, 11.7%)	문곡면(2,162명, -6.2%), 향남면(1,927명, -5.9%), 화성면(2,200명, -6.4%)
홍성군	온하면(2,311명, -12.4%), 결성면(2,103명, -10.3%), 장곡면(2,919명, -10.2%)	해당사항 없음
예산군	오기면(4,454명, -13.9%), 신암면(3,533명, -12.6%), 봉산면(2,502명, -10.6%), 신양면(3,057명, -10.1%)	대술면(2,470명, -9.4%), 대흥면(1,769명, -8.4%)
태안군	해당사항 없음	고남면(2,386명, -9.1%)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액

✓ 지급액 설정의 기준 필요

-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현재 61%, 약 2000만원)
-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가 목표 설정 필요

<잠정안>

- 농어민 기본소득: 연 100만원
- 지자체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가구당(연50~80만원), 개인당(연30~60만원)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월 15만원 *농식품부보고안: 월 15만원(194만명)

➤ 연간 100만원으로 출발해 점차 확대. 목표는 연간 300~360만원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방식

✓ 1안: 읍면동 지역 균등지급 -예: 100만원 균등 지급

- 장점: 기본소득 원칙 부합, 간단 명료, 분명한 메시지
- 단점: 읍, 면, 동 지역의 낙후도, 인구소멸지수 차이 상쇄부족

✓ 2안: 읍면동 지역 차등지급 -예: 면 100만원, 읍동 60만원

- 장점: 지역소멸 대응, 농어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
- 단점: 읍동지역 지역주민의 반발, 기본소득의 원칙 저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

✓ 중앙정부

-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 약 10조의 일부
- 농어촌발전특별세: 5~6조의 일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의 일부(연간)
- 국부펀드: 재생에너지 등 수익금의 일부
- 기타 국토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예산의 일부

✓ 지방정부

- 단체장 재량사업비
- 각종 개발예산, 인구감소대응관련 예산의 일부
- 재생에너지 등 수익금의 일부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 방식

✓ 공모방식: 희망 지자체 우선 추진

- 장점: 신속한 추진, 적은 예산으로 시작, 중앙-지방정부의 우호적 협력, 지역의 자발성 촉진
- 단점: 지역간 불평등과 갈등 유발, 지역 간 위화감 조성
- *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한 신속 추진 필요

✓ 일괄추진

- 장점: 지역간 불평등과 불필요한 갈등 해소
- 단점: 조장기 막대한 예산 소요, 실행까지 준비기간 필요, 단일한 예산 매칭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불만

4. 농어촌기본소득 실시 사례

사례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연천 청산면 주민들 “이런 경사가”

접경지역에 인구감소로 한숨만 쉬던 지역
“지역 활기 찾았으면...인근주민들 부러움
(연천=뉴스1) 박대은 기자 2021-12-28 16:37 송고

댓글 0 | 가 4



“이제 농민들도 멋진 사회적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되자 대상지 주민들은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이나”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연천군 청산면 인구(약 3800명)

5년 동안 개인당 월 15만원 지급

경기도내 10개 시군 응모

그 중 연천군 청산면 1개 면 선정. 나머지 면 가운데

1~2개 면 선정해 비교 조사

농촌기본소득은 OECD 국가 중 첫 번째 사례

“사업체수 109곳 증가, 유입인구 4.9% 증가”
(2025.6)



사례2: 신안군,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제 실시

신안 햇빛연금 현황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전국 첫 제정

지급 지역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5곳

총지급액 100억 돌파 2023년 10월

2021년 17억 첫지급 | 2022년 36억 원 | 2023년 47억 3분기까지

혜택 인원 1만775명

안좌도 태양광발전소 ▶

그래픽=이은영 key2018@mdlbo.com

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인구 유입 효과 특독... 8인가구 배당금 208만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인구 유입 효과 특독... 8인가구 배당금 208만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인구 유입 효과 특독... 8인가구 배당금 208만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인구 유입 효과 특독... 8인가구 배당금 208만원

연천군청 발표 No. 47 JNI 이슈리포트 2023.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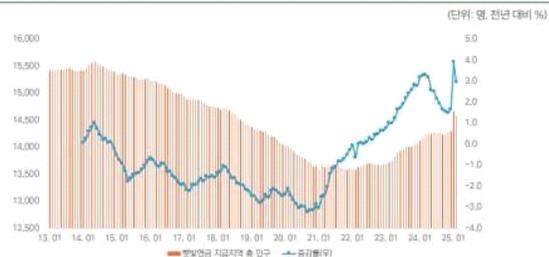


그림 31 월별 햇빛연금 지급지역 인구수 변화

주 1) 2025년은 2월까지임
2) 햇빛연금 지급지역 총 인구는 지도읍, 임자면, 비금면, 안좌면 인구수 합계 자료: 통계청



그림 41 연도별 햇빛연금 지급지역 청년 및 중년층 인구수 변화

주 1) 2025년은 2월까지임
2) 햇빛연금 지급지역 총인구는 지도읍, 임자면, 비금면, 안좌면 인구수 합계 자료: 통계청

사례3: 지자체 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공동결의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조례 주민 청구인 서명 발대식



전라남도 주최(2025.3.5, 국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2023-01-01 조례 제 00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빈곤·중층의 공적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주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란 (가)에 내거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의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우선하는 이 조례가 적용된다.
- 제4조(범위)** (가)의 대상은 농어촌기본소득 결정의 효과와 농어촌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가)의 대상·규모는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공약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가)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표준 조례안

영광군, 올해부터 연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전남도의회,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 원안 가결, 전남형 시범사업 본격화
장세일 군수, 시범사업 유지 적극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코리아리포트(2025.3.22)

4. 인도 Madhya지역 농촌마을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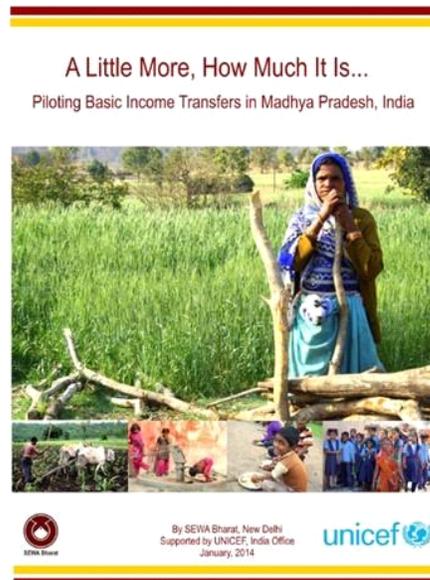
대상: 9개 마을
(대조군 12개마을)
기간: 18개월(2010-11년)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주택과 위생시설, 영양상태와
식습관, 건강과 의료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영향, 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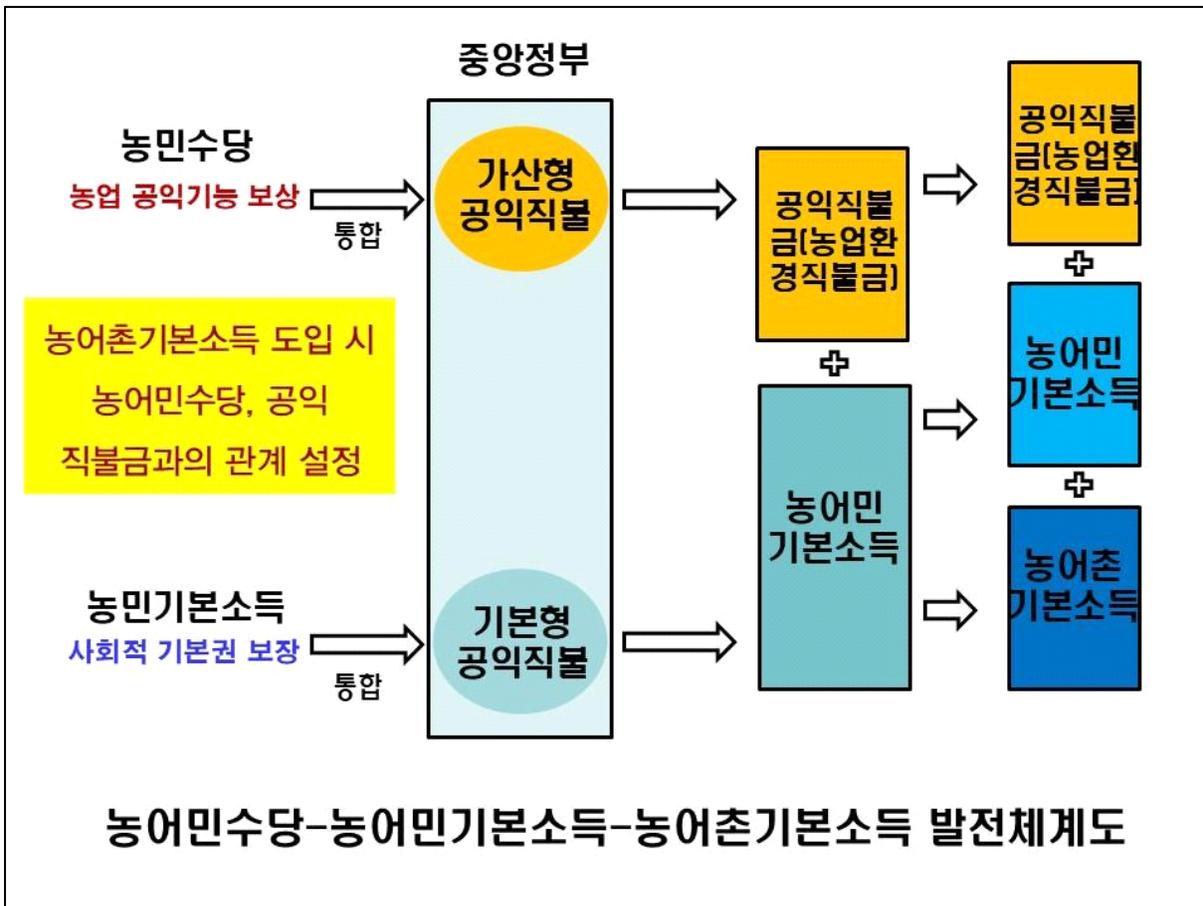
5. 기대효과 및 과제

기대 효과

1. 경제적 안정 도모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
3. 농어촌주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4.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증대
5. 사회적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 자발적 모임 등
6. 자립과 자치의 토대 마련
7. 자연생태, 경관, 환경 보존 활동 증진

과제

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과의 관계 설정
2. 추진 주체 설정: 농특위, 농식품부, 총리실, 행안부, 국가기본사회위원회(설치 시) 등
3. 법률 제정: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준비중(민주당, 기본소득당)
4. 자원마련: 재원에 대한 합의 필요
5. 거버넌스 구축: 정부, 지자체, 운동본부, 시민단체 등
6.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03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밭도 공짜, 버스도 공짜
**농민이 지은 햇빛농사로
 마을이 행복한 농촌발전소**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왜 돈은 기업이 벌고 피해는 우리가 봐야 하느냐?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우려부분?

2개이상선택, 2020년 인터스트리뉴스 설문조사)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주민 저항을 해결했을까?



덴마크 삼소섬, 에너지자립 100%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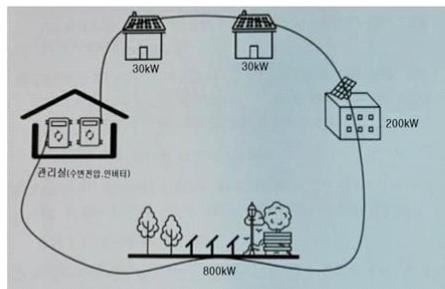
육상 풍력 터빈
11기 중 9기는 섬 주민 소유
2기는 협동조합이 소유

해상 풍력 터빈
10기 중 5기는 삼소섬의 자치정부 소유,
3기는 주민 공동소유, 2기는 협동조합이 소유

독일의 태양광 발전마을 가구당 750만원 소득



마을이 하나의 발전소가 될 수 있을까?



- 우리는 유럽과 다르다. 땅이 좁아 마을이 영향권
 -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조례의 출현
- 한 마을이 하나의 호텔이 된다
 - 개별 농가지붕을 하나로 연결해서 마을발전소를 만들
- **전기 사업법 19조를 개정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 **2개 이상의 발전소를 병합해서 1개의 발전소가 가능하다**

밤도 공짜, 버스도 공짜, 월1천만원 햇빛연금 마을

구분	용량 [kW]
1호 작은말 창고	76
2호 큰말 창고	35
3호 체육 부지	131
4호 풋살구장 주차장	72
5호 일반 부지(농지)1	204
6호 일반 부지(농지)2	480
합계	998



구양리 햇빛발전 하고 보니 대박이네

- 주민이 피해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발전소의 주인이 되었다.



솔라시도 100Mw, ESS저장장치 300Mw
주민참여 4%
주변 123세대 월50만원/20년간

VS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햇빛두레'
용량 1Mw 마을주민 100% 소유
매년 1.2억원의 마을 67세대 수익

- **대규모로 집적하면 계통망이 필요하고 소규모로 분산하면 지소지소가 가능하다**

국민의 주인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자

1 MW -복지마을



마을공용차량 행복버스운영

1일 1회 운영 (2인 이상 이용)
마을 행사시 운영 (마을사무장 운행)



마을공용 무료식당 운영

1일 1회 점심운영(주말포함)
조리인력 2명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저녁운영계획



마을행사지원및 문화관람

각종 마을행사지원
노인회, 부녀회 문화공연 관람지원

천 개의 구양리가 가능할까?

영농형 태양광은 하늘 햇빛농장으로
1만5천ha의 비축농지에서 농사지며
7.5GW 용량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함
(7천5백 개 구양리 가능)

1만5천ha는 전체 농지의 1% 수준이고
비축농지의 전체농지의 5%인
8만ha로 늘리면



(4만개의 농촌마을 모두를 구양리로 만들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과 에너지가 공존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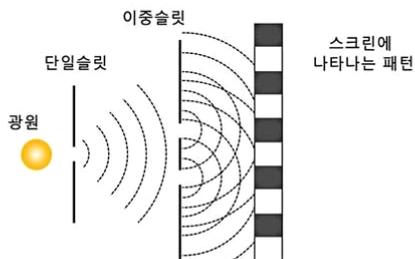


농존 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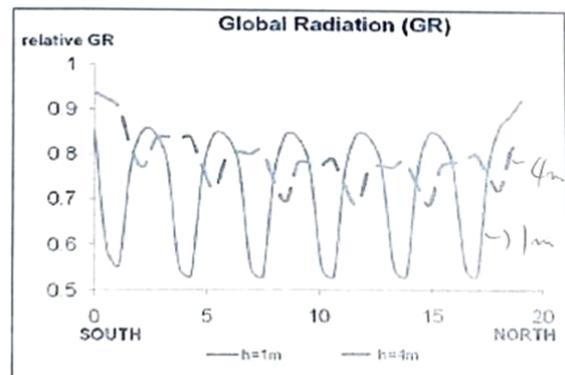
영농형 태양광

빛의 파동효과로 농사가 된다



※ 회절광 효과

태양광 모듈이 높을 수록 태양광은 지면에 더욱 균일하게 조사됨



광포화점 이상의 햇빛은 필요없다

광합성속도 (CO₂mg/dm²/h)

광포화점

벼, 옥수수, 밀

조도 (klux)

- 작물마다 생육에 필요한 포화 광합성량 존재 - 벼: 50klux(약5시간/일)
-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태양광은 더이상 작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않음 (전력생산 가능)

작물	광포화점(KLX)	작물	광포화점(KLX)
옥수수	80 ~ 90	쌀	40 ~ 45
수박	80 ~ 90	당근	40
토마토	80	고구마	30
오이	55	상추	25
블루베리	45	팥	25
양배추	45	벼섯	>20

영농형 태양광 수확량은 얼마나?

운영기관	지역	대상작물
등서발전 (5개소)	파주,당진,경산	벼(92.8%),콩(86.9%) 보리(91.9%),대파(90.3%)
	원광전력 (19개소)	나주,청원,용진
녹색에너지 연구원 (7개소)	나주,보성	마늘(81%),양파(88%),배(93%), 포도,녹차(105~121%)
슬라팜 (2개소)	청주	벼(86%),감자(91%),배추(87%)



영농형 태양광은 햇빛 농사다



논에도



밭에도



하우스에도

농업 매출
쌀 600평 240만원/년

영농형태양광 매출
600평에 2000만원/년



순이익 160만원

6배



순이익 1,000만원

영농형태양광은 농촌의 미래

영농형 태양광100kw는 30년생 소나무 423그루를 매년 심는 일입니다
탄소배출저감 56톤CO2e은 632만원의 EU탄소배출권에 해당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벼의 고온피해를 막아준다
과수의 냉해피해를 막아준다



전기 트랙터

70마력 자율주행 가능
작업시간 14시간
탄소배출저감 54톤 CO2e
(409그루/년)
트랙터가격 8천9백달러



마을정미소

태양광 정미소
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쌀

친환경브랜드
탄소배출권 판매

마을공동체라면 금융해결 가능하다 (수익권 담보대출)

건전성 흔들리는 '농협·수협'...부실채권 폭등에 외부 투자기관까지 접촉

농협 공동대출 부실채권 규모 10.6배 수협 7.4배 증가
외부 부실채권 투자전문기관에 채권 매각 계획

전민경 기자 jrmk@thnews.co.kr 등록 2024.09.27 17:51:48



1. 농협 상호금융 부실채권 14조원

-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2. 태양광 대출은 매우 안전한 투자

- 태양광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12%
- 2022년 7월 기업 대출 연체율 0.24%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자원량은 15GW (?)



현재 내수호의 만수면적 10% 사용과 담수호의 20% 사용을 허용
- 프랑스는 담수면적의 60% 사용

우리는 현재조건에서 10%씩 늘려도
15GW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확보된다

부남호 300MW, 관월호 500MW
현재 주민 4%의 이익공유방식
주민과 의회는 반대



서산시 376개 마을 월1천만원
햇빛연금 가능하다

구 분	공사저수지 개소	만수면적 ha	10%자원량 MW	20%자원량 MW	30%자원량 MW
내수호	3,369	39,058	3,906	7,812	
담수호	22	23,826		4,584	6,876

전기가 있어도 보낼수 없다고?

2031년까지 계통선로 중단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제주



송전탑은 평균 80개월,
변전소는 평균 77개월의
건설 기간이 소요



햇빛연금마을 전용선로

- 전력계통망 우선연결
- 20년 고정계약
- 태양광 이격거리 예외

에너지도 자산지소

2 MW - 에너지자립마을

ESS, 에너지 자산지소로 전력계통망을 해결



미야코지마 섬 300가구
VPP 가상발전소 운영
지붕 7%는 태양광! 마당에는 배터리!

구양리 마을요금제를 만들자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 플랫폼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 ✓ 한낮에 태양광이 많을 때는 마이너스 요금제
- 전기차 기반 무료요금제
 - ✓ 전기차 하루 6시간 연결하면 19,000km 무료/년
- AI기반 자동실행 요금제
 - ✓ 가장 싼 요금에서 저절로 충전및 작동
- 풍력발전단지 50% 요금할인

월 50만원 햇빛배당, 농촌으로 이사 가자 !

3 MW - 영농형태양광 저탄소농업

저탄소인증 농산물생산
(탄소중립직불금/탄소배출권판매)

4 MW - 귀농귀촌지원

청년귀농 사무장 200kw 영농형 배정

5 MW - 햇빛연금마을

햇빛농사로 연금받는 탄소중립마을

햇빛연금 가능하다

부지

국공유부지 주민임대

비축농지 40GW (농지5%)
 댐과 저수지 20GW(만수면적30%)
 고속도로부지 5GW(방음벽, 유휴지)
 철도부지 5GW(기지창, 유휴지)
 공유수면 해상풍력 40GW
 국유림 육상풍력 16GW
 산업단지 지붕 47GW
 - 농지법시행령 개정(공동에너지 자립시설 허용)
 - 에너지자립을 위한 공유자원 사용특별법

금융

수익권 담보대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정
 - 제2 금융권 태양광대출 허용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개정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시설로 농업인 신용보증기금 사용
 녹색펀드 조성

 마을공동체태양광 20년 고정계약
 한국형 FIT 적용 전기값보장

계통

에너지고속도로

마을공동체발전소 계통 우선 지원
 송전탑 마을 에너지 기본소득지원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기요금개편
 전기료 인상분은 에너지배당소득
 분산 전원 발전차액 지원
 ESS 발전, 수요분산배치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선송전망-후발전소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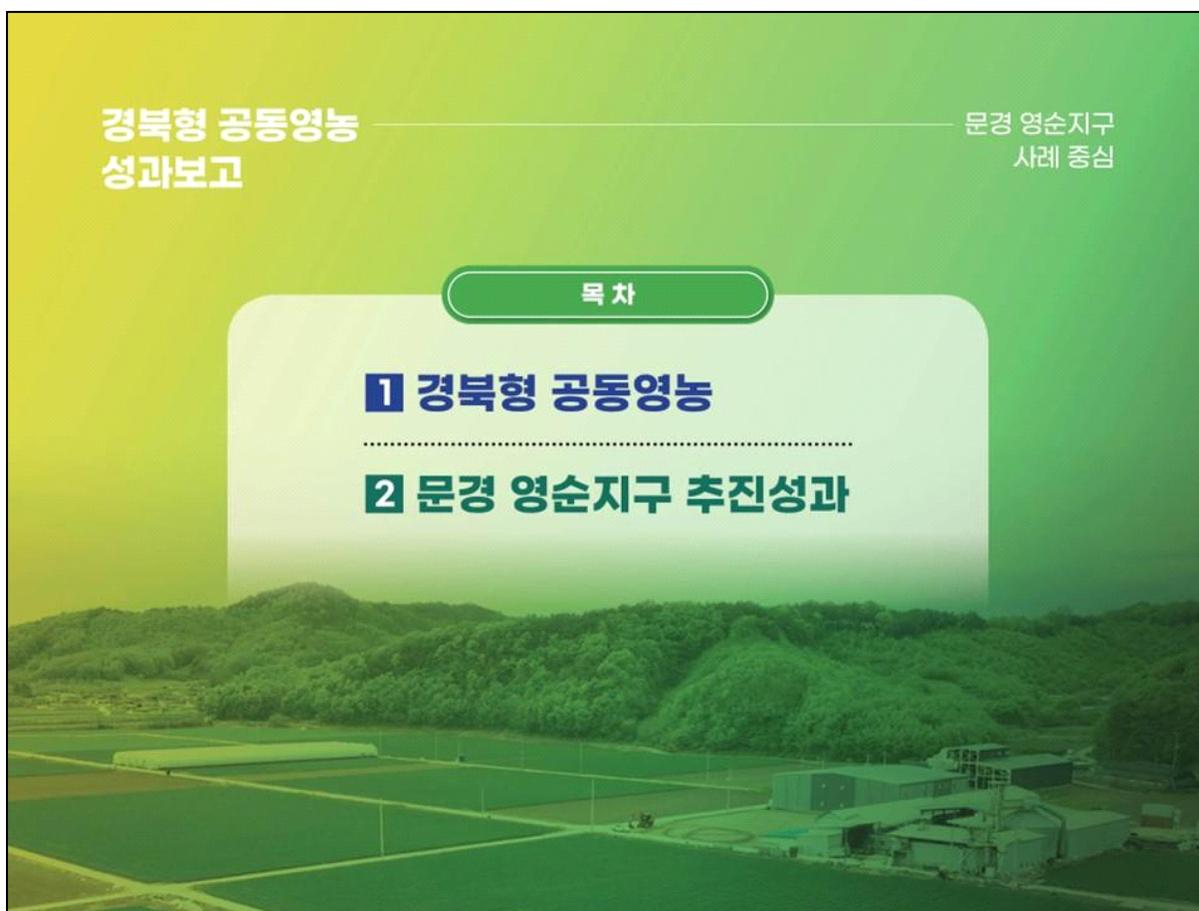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



04

늘봄 사례로 본 농촌마을 해법

홍 의 식 늘봄영농조합법인대표



1 경북형 공동영농

1. 「경북형 공동영농」의 시작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근로자보다
못 사나!”

위기



① 고령화, ② 인력 부족,
③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 안보 등
심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

↓

희망



국토의 1/3 해수면 아래, 부족한 일조량, 척박한 토양
But → 도시근로자보다 **농가소득이 더 높은 나라!**

▶ **농업 강국, 네덜란드에서 해답을 찾다!**

원동력은 ‘과학영농’과 ‘규모화’

1 경북형 공동영농

2.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도입

☑ 2모작 소득작목 재배

- 기존 벼 단작
→ 하계, 동계
2모작으로 전환

종 ▶ 양파·감자



☑ 농작업은 기계화로!

- 농지 규모화로
기계화 영농
- 어려운
농작업도 쉽게
→ 이모작 영농 가능



☑ 농가는 법인 조합원으로!

- 농업법인 구성
→ 경영은
법인에 맡김
- 농가는 조합원으로
공동영농 참여



☑ 소득은 배당으로!

-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 배당
- 영농참여 인건비
+ 판매정산 후
추가 배당



2 문경 영순지구 추진성과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2024
(2년간)



사업자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 홍의식)



사업규모
80농가 110ha



총사업비
35억원



위치
문경 영순면 울곡리 일원

지원내용 청년교육시설, 퇴비장(자원순환시설), 선별장, 공동영농장비 등

2 문경 영순지구 추진성과

2. 참여농가 현황

법인현황

사업자
대표 홍의식

직원 6명

준조합원
74농가

농가현황

30대-3명

60세 이상-74%

80세 이상-10농가

청년농현황



홍동환 | 30세
승계농



홍정환 | 38세
귀농_승계



강상묵 | 30세
귀농_서울

“ 농가고령화 심화 ”

2 문경 영순지구 추진성과

3. 추진상황

- 2022. 10.** 문경 공동영농 사업선정
- 2023. 01.** 영농법인 설립, 공동영농 계약 완료
- 2023. 05.** 농기계 등 공동영농장비 구입
- 2023. 06.** 콩 파종 105ha
- 2023. 07.** 선별장, 자원순환시설 등 착공
- 2023. 11.** 콩수확, 양파 식재 (56ha)
- 2023. 12.** 첫 소득배당 (998백만원)
- 2024. 03.** 봄감자 파종 (31ha)
- 2024. 06.** 봄감자, 양파 수확 ▶ 콩 파종
- 2024. 09.** 추가배당 (159백만원)
- 2025. 01.** 2년차 배당 (945백만원)

2 문경 영순지구 추진성과

4. 영농계획

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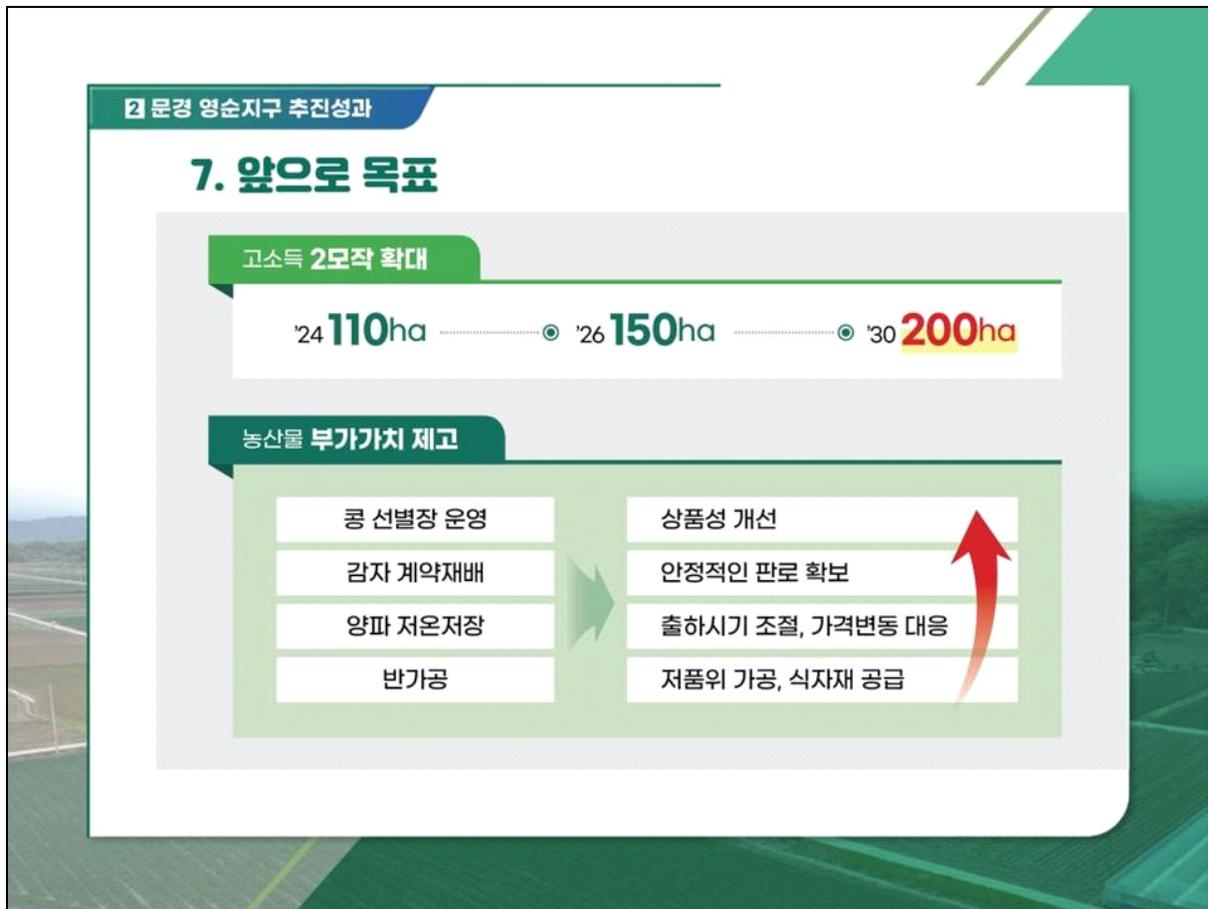
- 콩식재(105ha)
- 벼식재(5ha)

동계

- 양파식재(56ha)
- 감자식재(31ha)

- 6월 콩 파종
- 10월~11월 콩 수확
- 11월 양파 이식
- 3월 감자 파종
- 6월 양파·감자 수확, 콩 파종







0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례

김 돈 곤 청양군수

청양의 희망, 기부로 피어나다



목차

- 01. 청양군 일반현황
- 02. 청양사랑기부제 현황
- 0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 1. 탁구부 지정기부금 사업
 - 2.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 3.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 4.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 5. 행복누리센터 도서 및 장난감 지원
- 04. 향후 계획
- 05. 정책 제언
- 06. 보도자료



1. 청양군 일반현황

05

민선 7-8기, 군정 주요성과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인구수 대비 도내 1위 (1인당 2천만원)



- ✓ 민선 7기 이후 공모사업 260건 5,670억원 선정
- ✓ 도 균형발전사업 역대 최대규모 1,311억원 확보
-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320억원 확보

공공기관 최대 유치

민선 7기 이후, 신규 도 공공기관 4개소 유치

-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연간 30만명 이상 방문 / 일자리 100여개 창출
 -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87억원 / 34개 업체 입주, 연간 12만명 이용 / '25년 6월 개관
 -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198억원 / 연간 교육생 2만명 / '25년 6월 준공
 - ✓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168억원 / 연간 교육생 3.5만명 / '25년 7월 준공
- ※ 도 공공기관 총 8개소 보유 → 1,600명 상주

1. 청양군 일반현황

06

민선 7-8기, 군정 주요성과

푸드플랜 활성화

전국을 선도하는 농업소득 증대정책

- ✓ 먹거리 종합타운 활성화
8개 시설 조성 완료 → 가공, 포장 기능 확대, 식품 안전성 강화
 - ✓ 관계시장 확대
먹거리 직매장 2·3호점(대전) 추가 운영
학교급식, 쇼핑몰 등 매출 증대 → 2025년 매출 100억원 목표
 - ✓ 제도적 기반 강화
 - ① 기획생산 농가 (1,200 농가 550개 품목 육성)
 - ② 군수품질인증제 (5단계 15 실천과제) → 품질인증마크 부여
 - ③ 기준가격 보장제 →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 차액 보전
- ※ 먹거리 지수 평가 3년 연속 대상 (S등급)

전국 최고 골프환경 조성

골프 인구 천만명 시대 대비

- ✓ 전국 최대규모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유치
 - ① 사업비 297억원, 23만m² 규모
 - ② 200실 규모 파크골프텔 건립 (500억원)
 - ③ 연간 10회 이상 전국대회 개최 등 → 연간 40만명 이상 방문
- ✓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
노년층 체육관, 식당, 로컬푸드마켓, 실내연습장 등 총 250억원
- ✓ 금강변 파크골프장 개장
18홀 규모, 일 200여명 방문
- ✓ 금성백조 골프장 조성 (민간)
27홀, 131만m² 규모

2. 청양사랑기부제 현황 07

모금 및 답례품 현황



안정적인 기부금 모금 및 답례품 발굴 ▶ 정책 효과 극대화

2. 청양사랑기부제 현황 08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 MOU 체결

- ✓ **협약대상** 청양소방서 등 공공기관 16개소
- ✓ **협약내용** 청양사랑기부제 활성화 (참여유도, 홍보 등)
- ✓ **협약결과** 810명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홍보의 날 운영

- ✓ **운영일시** 군민과의 대화,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 상시
- ✓ **운영대상** 주민, 직장인 등 3,200명
- ✓ **홍보내용** 제도(일반/지정) 설명, 참여 독려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09

지정기부 · 일반기금 주요 사업

지정기부	지정기금	일반기금	일반기금	일반기금
				
정산 탁구부 훈련지원 사업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AI 스마트 돌봄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행복누리센터 도서·장난감 지원
청소년	노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
사업비: 100백만원 사업기간: '24.~'25.	사업비: 52백만원 사업기간: '25.~	사업비: 30백만원 사업기간: '24.~'26.	사업비: 10백만원 사업기간: '24.	사업비: 50백만원 사업기간: '25.

5대 사업 242백만원 추진 ▶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 실현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10

1 정산 탁구부 훈련지원 사업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지원 사업 (2개 사업)

- ✓ 사업내용 **훈련용품, 대회출전** 등 지원 (100백만원 / '24~'25)
- ✓ 사업대상 정산초, 정산중, 정산고 탁구부 총 58명 (25.4월 기준)
- ✓ 주요성과
 - ① 탁구부 청소년 및 가족 **인구유입** (총 118명 전입)
 - ② **전국대회 수상 실적**
 - 제40회 대통령기 단체우승, 제70회 전국종별 단체우승, 제53회
 - 전국체전 단체우승, 제62회 회장기 단체우승/복식우승 등
 - ③ **국가대표 발탁** (정산초 유선웅 선수)



농촌 학교의 **학령인구 증가** · 인구유입 효과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11

2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동네 어르신 '함께 한끼' 사업

- ✓ 사업내용 경로당 밀키트·도시락 배달사업 (52백만원 / '25~)
- ✓ 사업대상 관내 20명 이내 소규모 경로당 (약 10개소)
- ✓ 기대효과
 -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여 (노인 영양실조 해소)
 - ②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한 반찬·도시락 제공으로 관내 농가 소득증대 기여 (푸드플랜 연계사업)
 - ③ 소규모 경로당 활성화 기여



어르신 급식 환경 개선 · 관내 농가 소득증대 "일거양득"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12

3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 돌봄로봇 지원

- ✓ 사업내용 스마트 돌봄로봇 「다숨K」 제공 (30백만원 / '24~'26)
- ✓ 사업대상 7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20명)
- ✓ 기대효과
 - ① 어르신 정서관리, 인지능력 강화 등 돌봄 제공
 - ② AI로봇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대응 등 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
 - ③ 빅데이터를 통한 욕구 분석으로 생활 여건 개선



노인 고독사 · 치매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13

4.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청소년 ABC (AI Branding Cheongyang)

- ✓ 사업내용 인공지능, 커뮤니티 매핑 등 디지털 교육 (10백만원)
- ✓ 사업대상 관내 청소년 총 96명
- ✓ 기대효과
 - ① 도·농간 **균등한 디지털 교육 기회** 보장
 - ② 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학교·관내 사회적기업 연계 운영을 통한 **창업·진로 체험 기회** 제공
 - ③ 청소년기 기부 의식 제고 및 애향심 고취 등



농촌 청소년의 디지털 사각지대 문제 해소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3. 청양사랑기부금 추진 사업 14

5. 행복누리센터 도서 및 장난감 지원

영유아 도서·장난감 구입비 지원

- ✓ 사업내용 복지·문화 복합센터 내 영유아 용품 구비 (50백만원)
- ✓ 사업대상 관내 영유아 (행복누리센터 이용자)
- ✓ 기대효과
 - ① 부모의 **육아 비용 절감**으로 출산 장려 도모
 - ② 시설 내 다양한 영유아 도서 및 장난감 활용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 기여
 - ③ 안정적인 양육 및 보육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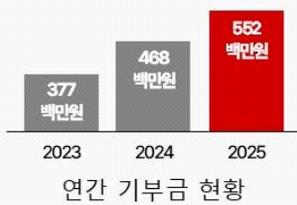
영유아 교류소통 공간 제공 ▶ **행복한 육아 환경 실현**

4. 향후 계획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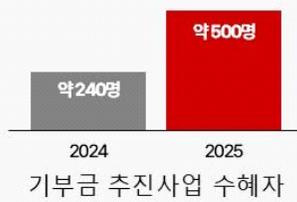
모금 확대

2025년 기부금 552백만원 달성
기부자 5,000명 참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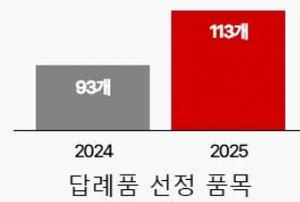
기금사업 발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기부금 추진사업 수혜자 확대



답례품 강화

2025년 답례품 업체 10개소
품목 20개 추가 선정 목표



청양사랑기부제 내실화 ▶ 농촌 문제 해결의 견인차

5. 정책 제언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필요

현행

지역과 상관없이
세액공제혜택
일률 적용

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

개선

인구소멸 지수에 따른
세액공제
인센티브 적용

(예시) 인구소멸고위험지역 10%p 추가공제

정책 취지(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제도 개선 ▶ 농촌 소멸 극복

